

■ 지방 없는 나라는 없다

③ 기업도시 지원책 강화하라

“혁신도시 대응책 뭘가”

시정질의 핵심쟁점 예고

도시개발·토지수용권도 기업에 줘라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뼈대로 '국토 특화'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무안 등 '기업도시'도 고민에 빠졌다. 경쟁력 강화라는 정부 방침은 솔깃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과연 지방으로 쓸만한 기업이 오겠느냐는 의문이 들어서다.

더욱이 정부가 공기업 이전이 핵심인 혁신도시를 첨단기업 유치 등 지방경제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기업도시'는 '혁신도시'와도 경쟁을 해야 할 판이다.

이에 따라 착공도 못하고 있는 기업도시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에 도시개발권과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등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유대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착공도 못했는데”=▲무안

법 개정해서라도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위한 우대정책도 병행

(산업교역형) ▲영암·해남(서남해안), 태안, 무주(관광레저형) ▲충주,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가운데, 현재 기공식을 한 기업도시는 현대건설의 태안 뿐이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규제 완화는 무안, 충주, 원주 같은 산업교역·지식기반형을 추구하는 기업도시에 치명적일 수 있다. 투자를 검토했던 기업들까지 접근성·기술·자본 등이 우월한 수도권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 등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축소될 수 밖에 없어

그 공백을 산학연 클러스터로 메운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임대전용산단을 만들어 정보통신·바이오 등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도시와 개발 컨셉트가 중복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와 6개 기업도시가 첨단산업 유치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무안기업도시 관계자는 “컴퓨터와 로봇 등을 생산하는 첨단 성장산업단지 및 웰빙 건강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려는데 수도권 규제완화와 혁신도시의 첨단산업 유치로 벌써 기업들의 분위기가 썰렁해졌다”고 걱정했다.

◇“인센티브 늘려 달라”=이에 따라 기업도시 관계자들은 기업도시 특별법을 고쳐서라도 참여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안기업도시 참여 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출범 이후 한 번도 기업도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다.”

특히 기업도시 민간이 주도하는 만큼 국가가 SOC를 확보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즉 SOC확충을 비롯한 국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한 참여기업들의 추가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J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대규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 한해 간척지 매립권 무상 양도 ▲내국인 카지노 허용 근거 규정을 마련이 시급하다. F1지원특별법 제정, 개최권료의 50% 국가지원, 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등을 국가차원에서 도와줘야 한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대기업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도시개발 및 토지수용권을 부여하는 등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중국기업 등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유대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부터 광주시의회 임시회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사업' 축소 또는 변경 움직임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도 광주·전남 혁신도시, 지방예산 삭감 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동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양해령 의원 등이 혁신도시 대응책 등을 집중 부각시킬 전망이다. 양 의원은 이날 열리는 제 167회 임시회에서 “정부가 20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인데, 이 경우 민영화 대상에 들어있는 한국전력의 나주 이전이 무산될 우려가 크다”면서 광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따질 예정이다. 혁신도시 건설로 거둬들일 지방세가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물거품이 될 경우 지방 발전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한전 이전을 사수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양 의원은 “기대했던 만큼 지방세가 들어오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문

제는 무엇인지, 광주지역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도 함께 따질 것”이라고 했다.

나종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지방예산 10% 절감 방침으로 이 지역 관련 현안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광주시교육청도 지방예산 10% 절감 방침에 맞춰 교육비 특별회계 10% 절감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급식지원비·도서관비 등도 삭감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절감 계획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이날 시정질의에서는 광주시가 추진중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효천역~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전남대 사거리~터미널~시청~월드컵경기장(27.4km) 등으로 이어지는 노선 중에서 전남대 사거리를 지나도록 한 당초 계획을 전남대를 직접 통과도록 바꿔야 한다는 등 도시철도 2호선 노선 관련 논란도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왼쪽에서 네번째)와 최인기 정책위의장(다섯번째)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축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선진·민노 '美 쇠고기 저지' 공조

김효석 민주당 대표 “청문회 열것 ... 한나라 동참해야”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은 22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관련, 대정부 공조전선을 구축해 적극 대처기로 하는 등 야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불확실한 데도 사실상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선결조건으로 쇠고기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는 등 정부의 협상전략 부재와 광우병 우려에 대한 지적이 여론의 풍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소극적인 경우 다른 야당과 연대해서라도 국회 청문회를 열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근본대책이 전혀 없는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 한나라당도 민생에 적극 대처한다는 차원에

서 청문회 개최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지금은 청문회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한 데 대해 “졸속협상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데 이해가 안된다. 언제 하자는 얘기냐”고 맞받아쳤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상은 광우병 발생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골육적인 것으로, 소문난 잔치상에 ‘광우병 쇠고기’만 놓인 셈”이라며 협상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전국한우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축산업계와 농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손학규 대표도 가락시장 도축장을 방문해

현장 파악에 나섰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제 협상을 위한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했고, 같은 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한 발짝 더 나아가 “졸속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진상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청문회는 물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야당 공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공조 요구가 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원외이긴 하지만 진보신당도 “청문회에는 참가할 순 없지만 협조할 것은 하겠다”며 협상 무효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과 미국산 쇠고기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우협, 24일 항의 시위 열기로

전남지역을 비롯한 전국 한우농가들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과 정부의 후속 대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항의시위를 벌이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22일 “전국 한우농가들은 이번 정부의 결정이 골육적인 검역 완화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무효화 한우인 총궐기 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는 24일 정부와

전청사 앞에서 전국 한우농가 1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항의 시위를 갖는다.

특히 협회는 이날 집회를 통해 미국의 동물사료조제 공포만으로 연령제한 폐지가 가능한 점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검역·수입을 중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협상 무효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 한우농가들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축산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는

졸속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남배 한우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은 “한우 '1+'급 이상 생산농가에 대한 품질등급화 장려금 등은 소수 농가를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며 “정작 필요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기준가격 상향 등의 대책은 빠져 있다”고 밝혔다.

나주에서 한우를 키우는 이모(38)씨는 “지금도 도축장에서는 '1+'급 이상의 소에 대해서 웃돈을 주고 구입하려는 상인들이 많다”며 “사료값 인상과 소값 하락으로 적자가 뻥뻥한 만큼 소 사육을 하루라도 빨리 접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